



# 안보전략논단

[2024년 10월호]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4(24-10) | 2024. 10. 1

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필요성  
나태종

미래전 인지 위협과 K-안보에 대한 소고  
박상중

활성화되어야 할 제대군인의 재취업  
장광열

## 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필요성

나 태 종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충남대/한밭대 교수 및 안보학교수)

### 국가보훈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국가보훈제도가 제대로 정립되고 공평무사하게 시행될수록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애국심이 배가되어 위협을 무릅쓰고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희생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투에 임하는 장병으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자신을 대신하여 가족을 돌봐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제도가 정립되고 뿌리내린 국가의 군대는 그만큼 사기가 충천하고 강한 전투력을 구비하여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 강군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의 20-50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제고된 국가위상에 걸맞게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제대군인과 관련된 3개 과제는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이다”,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을 피력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호국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다.

### 군 복무여건의 실상과 최근의 추세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업으로서의 군 생활은 계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일반직장에 근무하는 개념과 달리, 국가를 위한 충성과 헌신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복무」로 불리우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개인)은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고용주)에게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월급으로 받지만, 군인은 사용자인 국가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군 복무의 특성상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읍·면 단위 이하의 격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 1년 또는 2년 단위의 보직교체로 인해 빈번한 이사가 불가피하고,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제대별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또는 핵심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준비태세 강화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계급별 정원에 따른 인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군 조직에서 차기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 마련과 자녀교육 및 결혼비용 등의 소요에 따른 경제적 지출이 최고로 많은 시기에 「군 인사법」에 명시된 연령별 정년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가운데 영관급 장교의 경우 소령 계급은 2024년 1월부터 45세에서 50세로 정년을 연장하여 적용할 예정이고, 중령과 대령 계급은 각각 53세와 56세에 계급 또는 연령정년으로 전역을 해야 한다. 준사관은 55세, 부사관의 경우 상사 계급은 53세, 원사 계급은 56세에 전역을 해야 하는데, 개인별 복무연한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앞서 살펴본 내용이 주로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 해당되고, 중기복무와 복무연장(10년 이

하 복무) 제대군인들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병의 복무기간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초급간부들의 복무기간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군사 선진국의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과 시사점

제대군인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계급별 정원에 따른 인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군 조직에서 차기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군 인사법」에 명시된 연령별 정년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역을 해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군 조직의 특성상 매년 7,000여명에 달하는 제대군인들이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기에 전역하여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생애주기로 볼 때 이 시기는 본인의 주택 마련과 자녀의 교육비용 등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제대군인의 경우 신입사원이 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경력직으로 입사하기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희망하지만, 일반 사회생활과 전혀 다른 특수한 여건에서 경험한 직책별 경력을 취업과 연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2023년 9월 4일 KBS 9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66%에 그치고 있는데, 취업자 중에서도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전역예정 군인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에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군사선진국인 미국은 국방부에서 군 복무기간 중인 간부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제대군인부에서는 제대군인의료처, 제대군인보상처, 국립묘지관리처 등의 행정부처를 통해 제대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들이 순조롭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군 경력과 교육훈련이 통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적용하는 등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제대군인을 최고로 예우하고 있다. 그 결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94%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방부 산하의 제대군인청에서 제대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보상 등의 지원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재취업지원 이사회는 국방부를 대표하여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민간기관 간에 직업전환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군 특기교육과정 중 민간직업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하의 연방군 행정청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전직지원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전직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전직지원 조직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극소수 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대군인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 강화의 필요성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제대군인의 재취업이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와 계급구조의 특성, 일반사회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대군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역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전직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국가와 군 전직지원교육기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산업분야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적용한 전직지원교육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체계적인 전직지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인기관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제대군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취업에 필요한 경력관리에 전직지원정책의 주안을 두어야 한다. 제대군인의 취업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제대군인 본인이 민간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창출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지만, 실제 취업현장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구비한 제대군인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취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직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군사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가운데 한국적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제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군과 유관기관에서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게 하고, 장차 우리 군의 주역이 될 우수한 젊은이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이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미래전 인지 위협과 K-안보에 대한 소고

박 상 중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국방대학교 교수)

## 초연결시대의 현장에서(Hyper-Connected Society)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헤즈볼라 확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의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의 정권이익까지 결부되어 있어서 올겨울 극한(極寒) 등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 한 종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북한은 기록적인 대규모 수해에도 불구하고 올해 5,000개가 넘는 오물풍선 공중살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7차 핵실험 임박 등 군사적 도발을 질리도록 감행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위협 가중, 중국 군용기의 일본영공 침입, 심지어 미국의 앞마당 동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까지 서슴없이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2029년까지 5년간 방위비 5조 엔(약 48조 원)을 들여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Stand-Off 반격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일부 진보진영에서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비판하고, ‘통일 반대, 두 국가론’을 제기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북분단이 초래한 1,000만 이산가족의 통한(痛恨)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시대의 총아라 불리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군사적 활용이 급증하면서 미래의 전쟁 양상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또한 첨단 방송매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참혹한 전투현장을 누구나 손쉽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인명경시와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래전 양상을 인지 위협 측면에서 분석하여 K-안보(Korea-National Defense Security, 한국형 안보)의 발전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 미래전의 키워드 인지(認知), 비살상수단(Non-kinetic Tools)

장기화 문턱을 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은 미래의 위협과 전쟁방식의 변화에 대한 단초(端初)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위협의 변화는 현존 전투력 운용과 미래 군사력 건설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투력 운용개념은 군사 능력과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촉발함으로써 미래의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대규모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군사작전(Kinetic Military Operations)은 국내·외 비판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고 국가의 전쟁수행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전쟁수행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는 비살상 수단(Non-kinetic Tools) 위주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비살상수단의 운용효과는 전통적 군사력인 살상무기와 다르다. 비살상수단에는 군사정보지원작전(MISO, Military Information Support Operations), 전자전, 군사기만, 작전보안, 사이버전, 전략적 소통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막강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단호한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들어 상대의 전투의지를 말살하고 아군과 국민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비살상수단을 활용한 스마트한 전쟁수행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비살상수단을 활용한 전쟁수행방식은 시기적으로 전·평시 구분이 없다. 비살상수단은 인지적 조작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도구로서, 평시부터 상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상대 지도자의 건전한 결심을 방해함으로써, 상대 지도자가 아군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비살상수단을 전략적 소통(SC, Strategic Communication)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주변국을 우호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 군사위협의 지속, 비물리적 충돌의 확장, 인간의 심리영역에 대한 투쟁 등 새로운 전쟁방식인 인지전의 등장을 예고하였다. 현재 NATO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뇌과학, 신경과학과 연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지전(Cognitive Warfare)은 전쟁수행의 기본요소이다. 인지전은 기존의 군사이론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으로 5대 전장영역(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에 추가하여 제6의 전장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전은 인지전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없다.

회색지대(Gray Zone) 위협은 피·아 구분이 불명확하고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의 안보적 갈등이다. 회색지대는 전시와 평시, 군사와 비군사 활동 등에서 어느 한쪽 영역에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이다. 이와 같은 회색지대의 유형에는 역정보, 정치적·경제적 강압, 준군사조직·비국가행위자를 지원하는 대리전 등이 있다. 회

색지대에서는 상황발생의 주체와 원인이 불분명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도 어렵다.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DIM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에서 복합적인 위협 활동을 구사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이버·우주·전자전 등의 군사 활동을 통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회색지대 인지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위협의 주체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DIME 등 국력의 제반 요소를 통합하여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안보 다이나믹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Hyper-Connected) AI 기반의 첨단기술이 군사적으로 범람하면서 전쟁의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다. 과거의 전쟁은 주로 지상·해상·공중의 물리적 영역에서 수행되었으나, 현재는 범세계적 접근이 가능한 우주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간의 뇌를 조작·통제하려는 인지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초연결,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과 인명 중시 및 인간 존엄성 제고 등이 어우러져 ‘무기체계의 무인화, 자율화,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혁신적으로 촉진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AI 기반의 첨단무기체계가 일반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불특정·불명확·복합적 미래전에 대비하여 시간과 거리, 장소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합동전영역작전(JADO, Joint All Domain Operations)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JADO는 군사임무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합동전력을 최적화된 팀(TF, Task Force)으로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이다. 미래의 전장에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인명중시와 성숙한 사회환경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AI 기반의 첨단로봇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면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수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하여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이념·사상·가치에 대한 극단적 양분화 현상에 놓여있고,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155mm 포탄, 미사일 등을 제공한 반사이익으로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첨단기술을 전수받는 등 북·러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특히 대만해협의 일촉즉발 위기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군사일체화전략 기조를 바탕으로 자위대 통합군사

령부 및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과 연계하여 유기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48년 영국의 총리 팔머스톤(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Palmerston)은 하원 연설에서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가이익만이 영원히 존재하며, 국익을 따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라고 피력한 바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

## K-안보의 미래

우크라이나,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말로 하는 평화’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시각이 수많은 국민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K-안보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안보는 현실적 실상과 미래 우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인지 위협에 따른 미래전을 대비하여 군사력(Hardware)과 전쟁수행역량(Software), 군사조직편성(Orgaware)을 구체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필요한 전력 수요를 식별하여 적기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인지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 및 전략 개념, 교리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인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시급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미래로 나아갈수록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와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 정제(Filtering)하여 최적의 K-안보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드넓은 미래를 향해 초일류국가로 위대한 용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활성화되어야 할 제대군인의 재취업

장 광 열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존중 받아야 할 제대군인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가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사전 준비와 실시간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물리적 수단인 주된 요소가 국방력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 침단에 행동하는 군인들이 존재하고 있다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어둠의 터널을 뒤로하고 1946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국군은 국가의 안보위협을 최소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6·25전쟁과 같은 국가위기 시기에는 최전선에서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같은 각종 국제적 분쟁에 참여하여 국가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무장공비 침투, NLL 사건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국군 즉, 군인들에게는 일반인들이 겪지 않아도 될 각종 어려움과 제약이 따른다. 상시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운신과 처신에 제약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에게는 위수지역이 존재하여 주어진 권역 이외에는 출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군부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잦은 근무지 이동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구가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내집 마련의 기회도 어렵게 한다. 특히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장병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슬하를 떠나 입대하여 단체생활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상을 복무 중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군인들의 생활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이 없이는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묵묵히 수행하고 일반인으로 복귀한 제대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관심 가져야 할 제대군인의 재취업

해마다 많은 직업군인들이 군을 떠나 사회로 돌아오는데, 그 수는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제대군인이라고 하면 연금을 떠올릴 수 있으나, 실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19년 6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운 인원은 10명 중 4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6명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러한 현실은 제대군인 재취업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군인은 군의 특수한 근무조건에 하나인 계급정년이라는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계급의 상층부로 갈수록 정원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급정년은 젊은 나이에 군을 떠나야 하는 군인들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많지 않은 나이에 사회로 돌아온 제대군인들은 자신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해야만 한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제대군인들의 전역 당시 연령은 대부분 30대나 40대 혹은 50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나이에 신입사원 공채에 응하여 취업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선호하는 연령대가 아닐 뿐 아니라, 취업에 요구되는 각종 경험과 자격이 같이 경쟁하고 있는 사회 일반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특히 34세 이하의 중·단기 복무자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군의 특징적인 인적 구조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양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중기 및 단기복무를 한 젊은 장병 27만여 명 중 장래가 결정되지 않은 인원이 약 7만여 명으로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사관이 7천6백 명 중 3천8백 명으로 절반 정도가, 장교는 6천4백 명 중 5천3백 명으로 80% 이상이 장래에 대한 보장 없이 전역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와 함께 이들이 연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젊은 층이기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군의 구조적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하는 젊은 층의 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그동안의 안보적 기여의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각자의 가정적 안정을 이루고 국가적 출산율 저하 방지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100세 시대를 지향하고 국가 전체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 장기근속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국가적 필수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성화 방향

그동안 역대 정권은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예로

2003년 이전까지 지방보훈관서를 중심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2004년 이후에는 지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단기 전역자들을 위해 청년장병 취·창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도 많은 인원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할 뿐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제약 사항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대군인 재취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정확한 통계의 산출과 이를 바탕으로 제대군인과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만 범국민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와 변칙에 따른 통계의 오용은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결국 국민들에게 있어 제대군인들에 대한 호의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유리하게 하는 법령제정 등의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이끌어내는 필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다. 현재 제대군인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기관은 크게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로 나뉘어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제대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능력은 상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밀접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데, 상시적인 협업을 위해 TF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정부에서 국가적 취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제대군인들의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획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중·단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관심이다. 이들은 의무복무나 5년 이내의 기간을 복무 후 제대한 장병들로서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법령제정이 필요하다. 우선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경력을 사회전반에 걸쳐 인정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창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 중에도 이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데, 계급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경제적 추세에 따른 기업의 요구능력과 연계된 군의 복무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포괄적 지원 하 개인의 임무수행과 가용 시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